

與野 신경전에 국회 ‘개점휴업’… 민생법안 처리 등 뒷전

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
후반기 원 구성 협의 진척 없어
법안 심사·의결 등 과제 ‘산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뉴스

21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 신경전에 일주일 넘게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아 후반기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다. 인사청문회나 민생 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종료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는 차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여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7일 현재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당내 경선에서 김진표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게 전부다.

의장부터 공식 상태인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권한부터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의결뿐 아니라 정부 감시·견제 역할까지 하는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자리도 비어있다. 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은 모두 1

만574건이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다. 상임위에 오른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본회의 사회권도 의장이 갖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인 21대 후반기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는 서로만 탓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선출부터 하지는 제

안에 대해 “후반기 원 구성 핵심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을 막고 상호 견제와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 1, 2당이 나눠 맡는 것이 관례였다. 당연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연계돼야 함에도 민주당이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는 것은 법사위원장까지도 독식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속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희망한다. 경제와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데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시스템 운영 중지와 혼선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국회의장이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 몫인 점을 언급하며 “국회의장 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신경전에 원 구성 협의가 늦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1대 전반기 원 구성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의장·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2020년에는 6월 29일이어서 31일 지나 원 구성이 이뤄졌다.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몫 부의장·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한 원 구성이 이뤄진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459일 걸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국회 첫 등원’ 李... 책임론에 원론적 입장만

(이재명 의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 요구에
“낮은 자세로 의견 겸허히 듣는 중”



6.1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 첫 등원했다. 자신을 ‘국회 0.5선 초선’이라고 소개한 이재명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 중대한 일꾼,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등원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입장, 자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한 셈이다.

이 의원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요구에 “우리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 내 친(親)이재명·비(非)이재명 계파 간 논쟁과 관련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 뜻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해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정치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관련 ‘결국 국민이 정치를 한다’는 발언 자체가 에둘러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 의원 이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했음에도 수습보다 갈등 중인 당내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새로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대표를 서울시장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게 이 의원 뜻이 아니냐는 당내 비판 목소리를 두고도 “당과 당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 국회 상임위원회 지명 문제와 관련 “제 뜻대로 정할 수 없다. 당내 상황을 봐야 하고 원내지도부 의견을 존중해 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국회 돌아온 안철수... ‘당권 도전’ 시사

“가능한 많은 사람 만나 생각 공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등원하여 의원실에 명패를 달고 있다. /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7일 오후 국회로 처음 등원한 가운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차기 당대표가 2024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일부 주자들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한 가운데 안철수의 의원이 동참한 셈이다.

국회 의원회관으로 처음 등원한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자신을 ‘국민의힘 신입 멤버’라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가 가진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을 위한 만남이라는 해석에 “전혀 아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면서도 안 의원은 “이번에 나름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고 국민의힘이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당내 의원들과 만

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전부터 항상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 온 것이 재선 의원 때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어떤 새롭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아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관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영훈 기자

野 “검찰공화국” 맹폭... 대통령실 “인재풀 확장 고민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과 관련해 ‘검찰공화국 작업’이라고 맹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검찰 편 중 인사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재풀 확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일색”이라며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를 하는 인사기획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과 소위 문고리라는 부속실장도 각각 대검 운영지원

과장,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과 여당 내에서도 (인선) 너무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것은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4선 의원... ‘중립적 인사’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7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4선 이상호 의원(사진)이 추대됐다. 비상대책위원은 초선 이용우(경기 고양정)·재선 박재호(부산 남구)·3선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 등이 추대됐다. 원내비대위원으로는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선정됐다. 당면적으로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면 모두 6명의 비대위원이 구성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혁신형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민주당은 4선 이상호 의원을 혁신형 비대위원장으로 올리는 데 동의했다. 초선, 재선, 3선 의원이 추천한 비대위원 구성안 일부도 다음 당무위원회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우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중립적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